

2021년 9월 11일 시행 국가직 7급 세법 기출문제(가 책형) 해설 및 총평

공단기고시학원 세법 전임
CTA 이진욱

[총평] 드디어 25문제가 출제되는 새로운 제도의 7급 시험이 시행되었다. 2021년 국가직 7급 세법 시험문제의 수준은 예상대로 지엽성과 난이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기존 9급 평균수준의 난이도와 차별화를 두고자 하는 출제진들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시험이라 생각된다.

출제범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서만 일반적인 출제비중보다 문항수를 늘려놓은 구성으로 출제되어서, 국세기본법 9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 법인세법 6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4문항이 출제되었고, 문항수의 증가로 출제가 예상되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1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본 강사의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한 문항별 난이도는 상수준 6문항, 중수준 12문항, 하수준 7문항이 출제되어, 통상적인 시험문제의 상, 중, 하의 구성을 균형있게 안배했다고 판단되나, 상수준의 문항 중에서는 그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불필요하게 지엽적인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였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계산에 의한 문제 뿐 아니라 수준높은 지문과 긴 지문을 통하여 다른 세목에 비해, 그리고 이전 연도의 출제경향에 비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으므로, 향후 7급의 출제경향을 이번 한번의 시험으로 가늠하긴 힘들겠지만, 이번 시험으로만 판단해보자면 국세기본법의 비중을 늘리고, 법인세법의 난이도를 높였다는 출제의도가 엿보이는 시험이었다.

따라서, 오늘 시행된 7급 시험 뿐 아니라 9급 시험을 포함한 모든 세법시험에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해당 규정마다의 ① 견고한 취지의 이해, ② 규정의 정리, ③ 원조문의 확인이라는 절대적 학습방법을 따라야만 그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든 과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학습의 완전성을 기하길 바란다.

(공단기고시학원세법전임이진욱강사)

<문제1> 「소득세법」 종합소득공제 (하)

정답> ②

해설> ‘ㄴ’ 과 ‘ㄹ’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은 지문이다.

- 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연령기준(60세 이상)과 소득금액기준(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 ㄹ.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은 연 2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한다.

<문제2> 「국세징수법」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하)

정답> ④

해설> 5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는 출국금지요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감치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제3> 「소득세법」 원천징수 (하)

정답> ②

해설>

- 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반기징수의 대상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및 종교단체로 한다.
- ④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는 기본세율에 따른 연분연승법에 의한다.

<문제4> 「소득세법」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중)

정답> ①

해설>

-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소법 제43조 ③항). 즉,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 ④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소득금액 중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5>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중)

정답> ③

해설> 출자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한한다.

<문제6> 「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상)

정답> ②

해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채무의 인수를 인정한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위 ㉠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제7> 「소득세법」, 「법인세법」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

정답> ①

해설> (법인세법 제75조의 14 ①, ②)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위 ①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8> 「국세징수법」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 (중)

정답> ④

해설>

- ① 국세징수법은 하위법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하여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문제9> 「국세기본법」 국세우선권 (중)

정답> ③

해설>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9년 5월 20일(신고납부세목의 신고일)로서 담보채권(담보 설정일 2019년 5월 25일) 및 일반임차보증금(확정일자 2019년 5월 30일)에는 우선하고, 강제징수비,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우선되지 못하므로 다음의 금액이 종합소득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매각대금	70,000,000
(1순위) 강제징수비	(7,000,000)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15,000,000)
(2순위) 최종 3개월분 임금	(18,000,000)
(3순위) 종합소득세	(30,000,000)

* 종합소득세 8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일반임차보증금 및 일반임금채권은 매각금액부족으로 미배분대상금액이 됨

<문제10> 「법인세법」 분납 (하)

정답> ④

해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금액의 한도는 납부세액(22,000,000원)의 50%인 11,000,000원이 최대한도가 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를 분납기한으로 한다.

<문제11>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중)

정답> ①

해설>

- ② 계약의 해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는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억원(2022년 7월 1일 이후는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문제12>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중)

정답> ④

해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이후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문제13> 「국세기본법」 불복청구 (하)

정답> ④

해설>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14>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하)

정답> ①

해설>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를 하는 경우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문제15>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하)

정답> ④

해설> ‘ㄱ’과 ‘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

- ㄱ.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도 확정력을 가지지 못한다.
- ㄴ.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문제16> 「법인세법」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

정답> ②

해설>

-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 ㉡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문제17> 「법인세법」 손익귀속시기 (상)

정답> ③

해설> ‘ㄱ’, ‘ㄴ’, ‘ㄷ’은 옳은 지문에 해당하고, ‘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간경과분 미수이자계상을 통한 수익인식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즉, 익금불산입(유보)의 대상이 되는 지문이다.

<문제18>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중)

정답> ②

해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의 납부고지한 세액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사례에서는 2020년 3월 20일의 다음날인 2020년 3월 21일이 된다.

<문제19>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중)

정답> ②

해설> (1) + (2) + (3) = 7,000,000

- (1) (주)A는 지분비율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므로 익금불산입률은 50%가 적용된다. → $3,000,000\text{원} \times 50\% = 1,500,000\text{원}$
- (2) (주)B는 지분비율 30%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므로 익금불산입률은 30%가 적용된다. → $5,000,000\text{원} \times 30\% = 1,500,000\text{원}$
- (3) (주)C는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므로 10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된다. → $4,000,000\text{원} \times 100\% = 400,000\text{원}$

<문제20> 「부가가치세법」 납세지 및 사업자등록 (중)

정답> ①

해설> ‘ㄴ’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ㄷ.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 ㄹ.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에 있어 본점 및 주사무소 뿐 아니라 지점 및 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문제21> 「부가가치세법」 위탁매매시 납세의무의 특례 (상)

정답> ③

해설>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 포함)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 포함)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문제22> 「국세기본법」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

정답> ④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②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④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문제23> 「국세기본법」 법인 아닌 단체 (중)

정답> ③

해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한다는 단서도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에 해당 단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므로 1비거주자가 아닌 1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문제24> 「국세기본법」 재조사결정 (중)

정답> ③

해설>

- ① 재조사결정에 대한 적용대상 및 절차 등은 국세기본법에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②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대상에서 배제되며,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대상에서도 배제된다.
-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25> 「부가가치세법」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중)

정답> ②

해설>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 20,000 중 선수금 \$ 10,000에 대하여는 ₩1,000/\$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10,0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나머지 \$ 10,000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선적일) 현재의 환율인 ₩1,100/\$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11,0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10,000,000 + 11,000,000 = \underline{21,000,000\text{원}}$ 이 된다.